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전략

양길현*

- I. 머리말
- II. 동아시아 공동체: 이름짓기
- III.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
- IV. 결론을 대신하여

다양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동아시아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지리, 경제, 의식(특히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리적 근접성의 유용성, 상호 교류협력의 경제적 상보성, 그리고 동아시아 자아상과 연관된 '다층적 정체성'을 제시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가능성을 검토·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21세기 새천년의 시점에서 동아시아 다층적 정체성의 함양을 위해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유용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4가지 논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공동체의 일차적 가능성은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공동이익' 으로부터 출발한다. 둘째,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향적 추동력은 세계화에 부응하는 상호 교류협력의 경제적 상보성으로부터 나온다. 셋째, 동아시아 공동체의 성립이 보다 용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인들 사이에서 '다층적 정체성'이 발전되어 나와야 할 것이다. 넷째,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사회들 간의 동질성 확대로 나아가는 문화공동체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주제어: 동아시아 공동체,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상보성, 동아시아 자아상, 다층적 정체성, 문화공동체

*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부교수

I. 머리말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증대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서부터 1990년대 들어 부쩍 늘어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역동성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21세기 동아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또는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 모형은 무엇인가 등 다양한 문제제기와 설명 그리고 정책대안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동아시아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지리, 경제, 의식(특히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21세기 새천년의 시점에서 동아시아 다층적 정체성의 함양을 위해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유용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4가지 논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공동체의 일차적 가능성은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공동이익’으로부터 출발한다. 둘째,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향적 추동력은 세계화에 부응하는 상호 교류협력의 경제적 상보성으로부터 나온다. 셋째, 동아시아 공동체의 성립이 보다 용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인들 사이에서 ‘다층적 정체성’¹⁾이 발전되어 나와야 할 것이다. 넷째,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사회들 간의 동질성 확대로 나아가는 문화공동체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와 관련하여 사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논의의 전개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동아시아 공동체는 특정 형태의 통합체를 지칭하는 것 못지않게

1) 다층적 정체성이란 필자를 예를 들면 ‘내가 누구냐’의 질문에 대해 ‘제주도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며 동시에 동아시아 사람’이라고 자신의 소속을 지방과 국가 그리고 광역 3가지 차원에서 인지하고 수용하는 자아상을 의미한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는 지역협력을 통한 ‘과정으로서의 공동체’로서 파악된다. 둘째, 동아시아 공동체와 정체성간의 관계를 볼 때, 동아시아 구성원간의 연대의식 내지는 정체성의 공유는 처음에는 교류협력의 산물로서 태동하지만, 그러한 정체성의 공유가 일정 수준으로 확보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정서적-기능적으로 동아시아 교류협력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공동체 구축으로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효능을 보이기도 한다. 셋째, 이 논문은 동아시아의 교류협력 내지는 유대의 필요성이 어떻게 동아시아 정체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지의 발생론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의 다층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변혁적 접근에 주목하고 있다. 넷째, 이 논문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역사적 경험에 치우치는 ‘유산으로서의 동아시아’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상상으로서의 동아시아’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와 관련하여 우선 동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인식론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이름짓기부터 시작한다. 이름짓기 자체가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시작이며 또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것이다. 이어서 동아시아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의 유용성,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상호 교류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지문화(geo-culture)로서의 동아시아 자아상과 연관된 다층적 정체성을 제시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정체성간의 상호 연관·조응·작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새천년의 시점에서 동아시아 정체성 공유의 증진 내지는 ‘다층적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구축의 차원에서 복합국가론의 유용성과 언어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영상매체의 가능성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역사관 구성과 관련한 동아시아적 시각의 역할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II. 동아시아 공동체: 이름짓기

동아시아의 특성은 유동성이다. 20세기 국민국가 시대에 뒤늦게야 동참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가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다시 지구화의 도전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유동성과 복잡성을 동시에 띠고 있다. 그래서인지 백영서가 주창하는 바의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²⁾처럼, 동아시아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외연과 내포가 달라질 수 있는 실체로 보는 논의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동아시아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형상화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새로운 의미로 갱신될 수 있다는 데서 동아시아의 유동성에 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동아시아 담론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개념 자체도 관점과 의도에 따라 무언가를 포함시키고 배제시키는 일련의 복합적인 정치·경제·문화적 과정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역동성을 염두에 둔다면, 과연 평면적인 글쓰기와 논리로 입체적인 동아시아의 다양한 역동성을 담아낼 수 있는 지도 의문시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우선 이름짓기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입체의 한 평면이라도 세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실 이름짓기라는 것도, 무엇이 동아시아라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내지는 동아시아와의 연계 여부 등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지역의 구성에 “누구를 포함시키고 누구를 제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지배권 쟁탈 투쟁”(딜릭 1995, 67-68)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³⁾ 이처럼 기본적으로는 동아시아 이름짓기

2)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란 “동아시아를 어떤 고정된 실체로도 간주하지 않고 항상 자기 성찰 속에서 유동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고와 그에 입각한 실천의 과정”(백영서 2000, 58)을 뜻한다.

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권력정치 역학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⁴⁾ 여기서는 왜 동아시아인가 보다는 동아시아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우선은 지경제적인 맥락에서의 동아시아 이름짓기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논리적으로는 동아시아가 무엇인가 어느 정도 합의된 토대 위에서 왜 동아시아인가의 문제제기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왜 동아시아인가의 문제제기에 답하기 위해서 그러면 동아시아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논문은 21세기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가 무엇이고 왜 동아시아인지를 따지는 논의에서 지경제의 맥락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공동체가 지리적 인접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교류협력을 추구하는 데서 그 일차적 추동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

대표적으로 딜릭을 포함하여 많은 학자들은 “지역의 경계와 구조가 둘 다 유동적”이라는 인식에서 동아시아라는 것도 하나의 가공물이며 이름짓기도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자 역사적인 문제인 것으로 파악한다 (딜릭 1995, 44). 이렇게 동아시아에 대한 논의가 서구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사의 일부 내지는 하위체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는 데서 동아시아 이름짓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동아시아 공동체 내지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서구적 시각

3) 대표적으로 1990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제시한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East Asian Economic Group)에 대해 여기서 배제되는 데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들 수 있다.

4) 지명이나 해명이 국제정치적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한반도의 동쪽 바다이자 일본의 서쪽 바다를 한국은 한반도의 동쪽을 암시하는 동해로 지칭하는 데 대해 일본은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의 바다인 양 일본해로 지칭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일본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반영하여 일본해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5) 신윤환(2004, 2)도 동남아와 동북아를 합쳐 동아시아란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지경제적 맥락을 중시여기면서, “1970년대 이후 동북아 신흥공업국가에 이은 동남아의 고도성장으로 이른바 동아시아 발전모형의 존재와 그 타당성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나 서구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며, 특히 동아시아 정체성은 아시아의 주체적 자기발견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동아시아 이름짓기는 당연히 누구의 특허가 아니다. 그렇다고 동아시아의 외연과 내포를 누구나 나름대로의 상상과 전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공물에 불과한 것만도 아니다. 적어도 동아시아는 동남·북 아시아를 아우르는 광의의 동아시아와 한·중·일로 대표되는 협의의 동아시아 가운데 하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한 이름짓기에서는 무엇보다도 1980년대에 등장한 아시아-태평양(아·태)에 대해서 비판적 점검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아·태는 동남북 아시아와 남북 아메리카 그리고 대양주를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지리적으로는 환태평양에 더 가깝고, 아·태라는 지역구조의 창설에 주목하면 ‘구미태평양’⁶⁾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태평양 이름이 출현하게 된 데에는 구미인들의 전 지구적 확장과 연관된 정치적 책략이 개입되어 있는데, 즉 동아시아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1980년대까지의 상황에서 자본주의권 동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간의 경제협력 틀을 지칭한 것이 아·태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유럽간의 협력을 의미하는 ASEM과의 차이에서 아·태는 미국-일본 지배 구도에 자본주의권 환태평양 국가들이 따라나서는 틀을 통해 자본주의권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외양을 보이고 있다.

아·태는 지리에 토대를 둔 포괄성보다는 친미적 성향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친화력의 느슨한 지역권 양상을 보인다. 문제는 아·태가 선택적 친화의 결정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 의존하는 한, 공동체적 유대라든가 동질성의 확보보다는 미국과의 친소관계가 더 중

6) 딜릭에 의하면, 구미태평양에서 “아시아와 태평양의 사회들은 건축용 벽돌 격이었고 구미 열강의 전지구화된 이해관계가 조직원리가 되”(딜릭 1995, 53)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아·태의 대표적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 APEC인 경우 그 구성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다분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이어서 “쉽게 포착되지 않는”(오크펜 2003, 4) 협력체로 존립하는 이유도 바로 아시아·태평양의 이름짓기에서 그 구성원 사이에 포괄성을 통한 정체성 개발보다는 미국의 자의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아·태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이름짓기에는 일면 미국 주도의 아·태에 대한 보완이기보다는 미국 주도에 대한 동아시아의 정서적 반발과 함께 세계자본주의 경제에서 동아시아 지역권의 자리 찾기를 도모하려는 경제적 의도가 합쳐져 있다. 대표적으로 1997-8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한 미국의 행태에 실망하면서 성장일로에 있는 동아시아 경제들 간의 상호성 확대와 협조망 구축을 통해 구미에 대한 협상력을 갖자는 각성과 의식화가 크게 동아시아 공동체와 정체성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특히 1990-2000년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아·태보다는 동아시아의 역동성 내지는 중국 주도권 가능성을 환기시키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시대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물론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 대신하는 또 하나의 패권국가로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도 있다.

20세기를 전후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고양되고 있는 지역협력 내지는 공동체 강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태의 이름짓기에서 보듯이 고정성과 상호성을 통한 정체성 공유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동아시아 이름짓기 역시 책략의 차원에서 맴돌기가 쉽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바로 지리라는 동아시아의 고정성과 포괄성, 경제 및 문화에서의 상호교류라는 상호성이 얼마나한 정도와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구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동아시아 정체성의 가능성과 역할 부여를 통해 다시 공동체 구축의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III.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

1. 지리적 근접성

이 논문은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동아시아 내포이자 핵심 구성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를 ‘정태적인 물리적 양상’으로서의 지리가 아니겠는 가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즉, 딜릭의 주창과는 달리, “인간 활동의 출발점이 아니라 산물”(딜릭 1995, 47)로서 파악하는 지리의 유용성보다는 지리의 물리적 정태성-고정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이러한 고정성이 역사에서 어떤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는지의 동학에 주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다 고정적인 지리 위에서 동아시아 사회들 간에 각자의 독자성을 보유한 상호 교차를 통해 다양하고 중층적으로 펼쳐지는 문화교류, 정치경제적 상호성, 특정 가치와 정서의 공유 등에 주목할 때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 문제를 이렇게 고정적인 지리에 기초하여 구상하게 된 일차적 이유는 고대로부터 지리적 근접이 그만큼 상호교류와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왔고 또 실제로 그래 온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지리적 근접이 상호교류의 증진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예를 들면 고병익의 지적처럼, 상대적으로 접촉 및 교류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협의적 동아시아의 한·중·일 교류에서 그 역사적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접촉기회의 근소, 생활상의 차이, 공통어의 결여”(고병익 1995, 24-29) 등으로 인해 상호간의 관계는 소원했다. 또한 20세기 중반 냉전시기에도 광의의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한·중·일의 동아시아를 보아도 지리적 근접을 활용하여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또 그럼으로써 상호간에 공동체 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지리적 근접성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일차적 기초일 뿐이고, 실제의 교류협력 수준과 정도는 정치·경제·문화적 요인들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동일하다면 또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세계화 시대의 21세기 최근 경험에서는 한·중·일간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간 그리고 이들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걸쳐 지리적 근접을 통한 교류가 다른 지역권과의 교류에 비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한 지리적 근접에 기초하여 공동체로 나아가려는 추동력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이 교류협력의 증대를 가져오지 못하게 된 원인과 이유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주목하기보다는 동아시아 각 국별로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자급자족의 공동체를 영위해 온 역사에 주목함으로써 동아시아에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공통의 기반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논의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⁷⁾ 이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각국별 독자성=지역내 다양성’의 원심적 경향에 치중함으로써 동아시아는 외형적으로는 지리적 근접의 지역일지 모르지만 동아시아 내 ‘다양성의 원심화 경향’으로 인해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거나 지역적 정체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동아시아의 역내 다양성이 공동체 내지는 정체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견해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애초에 동아시아란 개념이 언어나 문화 등 지역 내의 어떤 동질

7) 예를 들면 배궁찬은 “동아시아가 기독교문화와 백인종이라는 종교, 인종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유럽의 EU와는 대조적으로 사회, 문화적 다양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배궁찬 2002, 9)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내부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 대신 동아시아 내부의 이질성은 부각시키는 특성의 입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적 특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동아시아 지역권 내에서 실제로는 가능하지도 않을 하나의 획일적인 공통의 인종적·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일차적으로는 각국별 독자성=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한 데 모아 어떤 형태의 상호성과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데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더 핵심적인 것으로 볼 것이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문제는 동아시아의 역내 다양성이 어떻게 지리적 근접을 통해서 평화적이고 건설적으로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국제정치적 정책 사안이 된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공동체 문제는 각국별 다양성을 어떻게 지리적 근접의 유용성을 활용하여 하나의 울타리 속으로 모아 나가는가의 정치적 선택과 전략의 문제이지 우연히 주어진 또는 역사적으로 가꾸어 온 어떤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지리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다.

교통통신 혁명의 결과 지리적 원격의 불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근접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계와 연합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금의 세계화 상황이다. 급속한 지구화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교류협력을 강한 지역적 바탕 위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통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근접의 정치경제적 유용성이 상당히 유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것이다. 지리적 근접에 기초하여 저비용-고효율을 도모하려는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지리적으로 협의의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광의의 동남·북 아시아로 확대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교통통신 혁명의 하나의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경제가 협의에서 광의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평화공영을 위한 공동보조의 비용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의 각국별 이해관계 고려는 여전히 동아시아 공동체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탈냉전 이후 21세기 현 시점에서 지리적 근접에 기초한 지역화 현상이 더욱 활발히 나타나는 이유는 2차대전 이후 세계가 장기간의 평화를 달성함으로써 지리적 근접과 전쟁 가능성 간에는 그다지 연관성이 적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2차전에 걸친 미국-이라크전쟁이나 9·11 테러를 보면 오히려 지리적 근접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어긋남과 함께 첨단 군사무기를 둘러싼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배후에서 작용하면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욱 더 지리적 근접과 전쟁간의 전통적인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경제적 교류협력의 유용함은 예나 제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가능성은 지리를 근거로 한 공동이익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지경제로부터 출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의 기반 역시 지리적 근접에 기반을 둔 공동이익 가능성으로부터 추동되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공동 이익’이 동아시아 공동체 가능성을 떠받치는 하나의 동인인 것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는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공동 이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또는 제약을 받아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경제적 상보성

지리적 근접에 기초한 공동이익이 가능하리라는 기대와 실제의 동아시아 역사에서 경제적 상보성이 얼마나 존재하였는가의 현실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바로 여기서 ‘유대로서의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이 요청되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지역 내 각 구성원들 간에 교류와 내왕이 없다면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그만큼 활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선 협의의 동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 동북아 3국간의 교류를 보면, 동북아 3국은 저마다 쇄국과 병렬적 독자성에 더 치중하였고, 그 결과 직접적 상호영향에 의한 역사가 전개되지 않아 동북아 3국간에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상호 유기적 연결은 미미했다. 이는 ‘다원성의 공영’이라는 의미의 동아시아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각국별 독자성에 편중되어 자급자족해 온 생활방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지정학과 영토 및 인구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중심이자 천하 그 자체임을 자처하는 중국의 중화사상 내지는 천하주의가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바라보는 “천하 중심적이고 단원적인 정치사회관”에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다원주의적 동아시아관은 존재하기가 더욱 어려웠다(이홍종 2002, 144). 한마디로 21세기 이전 지리적 근접에 기초한 교류협력의 결과로서 동아시아 주민들 간에 공동 운명의 유대와 자아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동아시아 공동체의 원시적 형태로서 유대로서의 동아시아가 구상될 수 있었던 계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18세기 말 서세동점이라는 외부적 충격이 그 대표적인 계기를 이룬다. 그러나 반제국주의 지리학으로서 태동한 19세기 동아시아 유대는 공동 이익의 추구라는 내생적 필요의 산물로서 장기간에 걸쳐 진전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는 데서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다. 서세동점의 외생적 충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각 국가마다 독자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대응책 마련에 급급 하는 한, 지리적 근접에 기초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대와 공동대응으로서의 동아시아 인식이 정치적 추동력을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구에 의한 식민지배가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함으로써 철저한 아픔을 경험하기 이전에 선형적으로 혈연적 집단과 지방적 공동체를 넘어서는 민족국가간 연대의식이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 애초에 무리였고, 그 결과 광역의 지리적 범주로서 동아시아 의식은 더

욱 존재할 수가 없었다.

19세기 서세동점을 경험하면서 서구의 공세에 집단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결속의 실마리를 보였던 유대로서의 동아시아 내지는 동아시아의 저항적 정체성의 성장은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제약 요인 때문이었다. 하나는, 동아시아가 각 국별로 민족해방과 국민국가 건설 그리고 산업화 등 서구형의 근대를 목표로 삼는 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내적 인식이나 유대보다는 서구지향이라든가 동양극복이 더 우선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일본이 탈아입구(脫亞入歐)를 통해 서구제국주의에 편승하면서 또 하나의 제국주의의 길을 밟아 나감에 따라 기존의 서세동점에다 동아시아 역내의 서세동점이 부가되는 이중적 식민화는 동아시아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군사적 식민주의 차원에서의 서세동점을 종식시킨 2차대전 이후에도 유대로서의 동아시아가 교류협력의 정치경제적 틀과 공동 운명체의 정체성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동서냉전의 대결구도 때문이었다. 2차대전의 이후 민족자결 방식으로 근대화를 추구함에 있어 동아시아 사회들은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으로 양분된 세계적 동서냉전의 대립구도에 편입되어 그 하위체계로서 동아시아 냉전구도로 재편되었다. 2차대전 후 미국의 반공주의로부터 부추김을 받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싱가포르 등 ASEAN이 출현하지만, ASEAN은 초보적인 동남아시아 유대로서의 의미를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보다 광역의 동아시아 공동보조를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ASEAN에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지역의 나머지 4개국이 빠져있었던 데다 한·중·일간의 역사인식적·정서적·이데올로기적 각축이 지속되는 한, 동아시아 지역 내의 상보성은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탈냉전과 지구화는 사태를 180도 바꾸어 놓았다. 유대로서의 동아시아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21세기로의 전환

을 앞두고 1990년을 전후하여 전개되는 탈냉전과 전 지구적 자본주의 화에 대응할 필요로 인해 경제협력 문제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어 나가게 된 것이었다. 이는 20세기 말 탈냉전-지구화의 도전 속에서 이데올로기적 외피를 민주적 자본주의로 취하든 아니면 시장사회주의라고 명하든 각국의 경제발전 내지는 부국강병과 같은 신중상주의적 목표가 다시 최고의 목표인 것으로 설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동아시아 지역 내 연계 및 유대의 필요가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동아시아의 미래 전망에 대한 낙관이 확산되던 1990년대 말 동아시아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는 크게 4가지 차원에서 문제제기와 자기반성 그리고 대안적 질서 및 자구책 모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첫째는, 1970~80년대 동아시아 모델로 지칭되던 국가주도 산업화 방식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자각이다. 사실 어떤 모델도 영속적이고 확실한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모델 역시 한시적이고 국면적인 유용성의 것임은 너무도 당연하다. 문제는 1970-80년대와는 다른 1990~2000년대의 변화된 국제환경에 발맞추어 기존의 동아시아 모델의 어떤 측면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갈 것인가의 재인식이다. 바로 여기서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기존의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간과되어 왔던 동아시아 경제들 간의 상호 연관성이 얼마나 긴밀한가를 새삼 일깨워 주었다. 태국에서 촉발된 위기가 인도네시아와 한국으로 감염·전파되어 나가자 동북아와 동남아가 별개의 경제 단위가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지정경제적 공동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북아와 동남아 또는 각국의 내부 정치적 사정에 관계없이 동아시아 지역 내 경제는 상호 긴밀하게 조정되고 유효적절하게 협력되어야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상정되었다. 바로 이러한 일깨움은 곧바로 1997년 ASEAN+3으로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류협력의 증대와 이

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정상회의의 정례화 및 공동성명 발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East Asian Vision Group)⁸⁾과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East Asian Study Group)의 설치,⁹⁾ 그리고 2000년 5월 쌍무적 통화스왑 협정 등 역내 통화금융 문제의 자율 해결을 향한 치앙마이 구상(CMI: Chiang Mai Initiative) 합의,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라는 대화창구의 가동,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 추진 등 동아시아의 공동이익과 공동보조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책이 모색되어 나간다.

둘째는, 1990년대 말 외환금융위기가 동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동시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 등 서방권의 자국 중심적 행태는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서, 그 대체물에 대한 전략적 모색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나가게 되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동아시아 경제의 내부적 문제로부터 연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를 부풀리고 또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서방권의 행태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21세기에 요청되는 유대로서의 동아시아는 한편으로는 19세기 서세동점 시대의 경우와 유사하게 패권적 구미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함의를 띠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별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19세기와는 달리 21세기에는 동아시아 문제가 역내 경제들

8)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 2001년 11월 말레이시아의 팔라렘푸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비전 그룹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평화·번영·진보의 지역> 보고서를 통해 “지역 내 모든 국민의 전면적인 발전에 기초한 평화와 번영, 진보의 동아시아 공동체 창조”(하루키 2004, 19)를 촉구했다.

9) 동아시아비전그룹과 동아시아연구그룹은 각각 1999년과 2000년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발의로 구성되어 2001년 제5차 아세안+3 정상회의와 2002년 제7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서 신윤환(2004, 16-17)은 한국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의 중간적 위상이 오히려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간의 공동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여전히 국제관계에서 정경분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21세기 동아시아 유대도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선택과 전략의 문제로 환원되어 있기는 하다.

셋째,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지구화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대응책 모색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구화에 대한 솔한 논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국 중심적이고 지방적인 차원에서의 문제해결로 소규모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이 보장되리라 여겨왔던 국지적 시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일반 대중들까지도 뼈아프게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 지구화는 “밀동치가 잘린 세계화”(임혁백 2001, 69)라고 지칭될 정도로 분명 강대국 중심으로 짜여진 전 세계적 차원의 위계질서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이 널리 인식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구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들 간의 유대와 공동보조를 통해 강대국 중심을 견제할 수 있는 자위적인 다자간 유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도 된 것이었다.

문제는 무엇을 기초로 한 유대인가인데, 그 하나의 방안으로 ‘지리적 근접에 기초한 공동이익’의 창출이 가능한가 전면에 부각되기에 이른다. 물론 아직 지리적 근접에 기초한 공동이익이 만족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쉬운 과제도 아니다. 그러나 신윤희환의 지적처럼,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모두 시장확대 및 투자유치의 필요성으로 인해 동아시아 역내 교류협력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의 본질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동남아시아가 더욱 더 지역협력을 절실히 요구함에 따라 기존 ASEAN을 넘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가능성은 그만큼 넓어지는 흐름이 존재하고는 있다.¹⁰⁾ 다만 21세기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 지

10) 동남아시아 경제의 본질적 취약성이란, “전체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 사이에 유사한 경제구조와 비교우위, 과잉노동력 등으로 인해 상호의존도가 낮고 상호경쟁성이 높은 지역경제적 특성”(신윤희환 2004, 7)을 지칭한다.

역협력의 미래 가능성은 진행 중에 있으며 그리고 지역 내 공동이익을 둘러싸고 다양한 구상과 기획이 시도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아시아 공동체는 '가능성의 예술'로서의 국제정치적 사안이자 각국 정부의 외교 및 통상정책상의 과제가 되고 있다.

넷째,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또는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를 발판 삼아 여전히 동아시아 경제는 지속적인 역동성을 보여 줌으로써 지역주의적 활로책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를 보면 ASEAN의 자체 결속도 강화와 함께 인도네시아 등지에서의 민주화 진전은 동북아시아와의 경제적 교류협력 뿐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차원에서까지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공동체를 추구하도록 국내적 지지 기반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 특히 한편으로는 1990년대 아시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방적인 활력을 보여주면서 중국경제가 부상해 나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98년 경제위기에 IMF 처방을 거부했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식 독자노선이 예상을 넘어서는 성공을 거둠에 따라,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는 유교자본주의, 아시아적 가치 또는 동아시아 발전 모델 등에 대한 기존의 담론을 보다 성찰적으로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식 내지는 IMF 처방식 시장경제를 견제·보완해 나가도록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 주었다.

요약하면, 20세기의 민족국가에 기초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넘어서려는 모순적 구상으로서 21세기 동아시아 유대라는 보다 큰 틀을 강조하게 된 동아시아의 새로운 정치경제적 역동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는, 1997-8년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 전반의 발전 잠재력과 경제규모의 비중은 여전히 유효하며,¹¹⁾ 그에 따라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활력을 보이고 있는 동

11) 예를 들면 경제규모 면에서 2002년 기준으로 ASEAN+3의 경제권은 세계 전체 GDP의

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역동성은 ASEAN+3의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동아시아 유대 내지는 공동체 가능성을 넓혀나가고 있다. 여전히 미래의 성과는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ASEAN+3이 EU나 미주 지역의 활력에 뒤지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미래의 가능성이야말로 21세기 동아시아 공동체의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

다른 하나는, 21세기 세계질서에서 EU를 제외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4대 중심축이 교차하는 동아시아는 19세기적인 서구 중심의 일방적 질서로부터 뿐만 아니라 20세기 양극적 블록화로부터 벗어나 다원화와 함께 유동적인 정치경제의 틀을 재구성해 나가는 프런티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동아시아의 유동적인 프런티어란 유럽공동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구적 시각보다 국민국가적 초점이 더 중시되는 근대성의 제약에 머물러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국가 중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는 현재와 미래 간의 괴리가 바로 동아시아의 유동성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지구화와 지역화 및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21세기의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지역화가 지체되어 있는 동아시아로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압력에 대응할 비전적 대책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즉, 하나는,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공동이익을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도출해 내느냐 하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도록 세계자본주의로부터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은, 후발의 이점을 살리면서 동아시아 공동체는 새로운 비전을 담아 21세기형 지역주의의 쇄신과 변혁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동아시아 자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중요성을 띠게 된다.

18.65%, 총교역액의 19.62%를 차지하고 있어서 EU의 34.51%, 35.59%와 NAFTA의 29.60%, 20.49%에 이어 주요 경제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관울 2004, 4-5의 <표 1>과 <표 2> 참조).

3. 다층적 정체성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정치경제적 역동성을 지닌 것으로서 동아시아 자아상이 민초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보편화될 수 있는 계기는 20세기 말 지구화의 총체적 전개에 조용하여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적 연대의 필요성으로부터 나왔다. 이에 따라 21세기 동아시아 자아상은 한편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자 결속으로부터 추동력을 이끌어 내는 소극성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미래의 가능성과 유용성이란 관점에서 정치·경제·문화적 관계 및 상호적 활동이 긴밀하게 전개되어 나가는 역동성과 그에 따른 공동번영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단순한 지리와 역사적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는 전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날 서구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또는 아시아로부터 탈출하여 서구로 나아가는 것에 치중되던 동아시아가 그 지평을 21세기 동아시아 역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이른바 ‘일상과의 대화’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21세기적 유대의 동아시아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곧 동양과 서양을 분리하거나 타 지역을 배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양한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를 새로이 재조명하고 나아가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더 강조점을 둔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동아시아 공동체가 ‘일상과의 대화’에서 다양성의 통합을 의도할 경우 문화나 세계관과 관련하여 연계 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서구에서 보다 강조되는 물질, 합리, 경쟁, 진보와는 대조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가 상대적으로 정신, 직관, 조화, 중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아시아적 특성 내지는 이념은 동아시아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 이유는 그러한 논의가 이분법에 치우쳐 있기 때문만이 아니

라 21세기적 역동성이라든가 비전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도식화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21세기 동아시아가 자아상이라든가 정체성에 대해 새로이 주목하는 이유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의 관계’를 중심에 두면서 또 그렇게 되어가는 일련의 추세를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것이다. 이는 지방-종족-국민국가 차원에서 홀로 서기를 추진해 온 지난 세기를 넘어서서 광역적 차원의 실용주의적 협력관계 설정이 지상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동아시아 내 실용주의적 협력관계 모색을 지역주의라고 지칭한다면,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주의 역시 다른 지역주의와의 공존 및 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열린 지역주의’를 지향하게 된다. 이렇게 동아시아 공동체가 동아시아 내부 사이의 협력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외부와의 협력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21세기 지구화의 중요한 추동력으로서 존재하는, 이른바 ‘서구와 동아시아간의 교호적 상승’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구화라는 21세기적 흐름 속에서 서구와 동아시아 간에 대등과 공존이 가능하고 또 상호이익이라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EU나 NAFTA와 같은 제도적 차원의 동아시아 공동체가 당장 구성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도적 연대 틀이 유용성을 갖는 만큼이나 그러한 공동체를 향한 대화와 움직임은 진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공동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어 나감에 따라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집단적 정체성은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난 세기를 지배해 왔던 일방적 서구문명에 대해 동아시아 문명이 동일한 자격과 위치에서 동서 문명 간에 상생과 상호상승을 꾀하는 게 가능하고 유용하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내지는 동아시아 정체성 논의의 의의가 존재한다.

동아시아 정체성과 관련하여 필자는 스스로를 지문화의 동아시아에 속해 있다고 의식하는 동아시아의 자아상은 공통의 문화라든가 유교 내지는 한자권과 같은 동질성의 확보 또는 이를 넘어서는 보편성의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아우를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의 교차’에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서 ‘문화다양성의 교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21세기란 시간대와 동아시아란 공간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주민들의 일상적 삶이라는 존재성의 3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탈근대로 지칭되는 새로움과 특성을 보인다. 물론 여기서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하여 탈근대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탈근대는 근대의 틀 속에서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라서 확정적인 무엇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탈근대란 “유럽과 미국을 역사의 종착지로 보는 근대성의 목적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를 정치조직의 주된 단위로 보는 것을 공격함으로써 이전의 근대화 담론과의 결별”(딜릭 2000, 89)을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런 식의 설명은 탈근대의 방향성 정도를 그것도 막연하게 제시하는 것일 뿐 명확하게 탈근대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다. 그러면 서도 굳이 21세기 초반 현 시점에서 탈근대의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더듬어 본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근대=서구를 의미하는 종래의 서구편향에서 벗어나서 탈근대=지구로 설정되는 21세기 지구화의 새로운 역동성이 인권, 환경, 민주, 평화 등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탈근대의 21세기적 변화 움직임에 조응하여 동아시아의 전통이나 토착성·지방성으로부터 보편성·지구성으로 전화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재조명·재창출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동아시아 자아상 설정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21세기 탈근대로의 전환에 따른 동아시아 자아상에 부응하여 필자는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라든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는 다른 동아시아 문화공동체¹²⁾를 구상하고자 하며, 그러한 문화공동체의 토대로서

동아시아 구성원들의 ‘다층적 정체성’을 주창하고자 한다. 당연히 동아시아의 다층적 정체성은 일차적으로는 바로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공동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지만 나아가 동아시아적 특수성이 보편성으로의 전화 가능성에 대한 공동의 자아 찾기라는 차원과 결부되면서 새로운 도전과 탈근대의 새로운 가능성 영역을 창출해 나간다는 데에 그 독특한 역할과 전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구축과 관련한 다층적 정체성은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사회가 달성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지방 및 지역적 토착성에 대한 재발견과 주체적 문화에 대한 강조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제 동아시아가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구 중심적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무엇’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련의 움직임에서 새로이 강조되고 구성되어야 할 ‘의식적 토대’를 구성한다.

21세기 초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나 다층적 정체성을 둘러싼 논의는 다분히 현재진행형이고 미래지향적이다. 그리고 하루키(2004, 49)의 지적처럼, 동아시아 정체성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입장만이 아니라 설정되어야 할 과거는 어떠한가의 문제” 의식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 속에서 지역을 성립시키는 계기를 발견”하는 작업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다층적 정체성 논의는 과거의 역사 못지 않게 “현재의 과제와 관계 그리고 미래의 목표와 비전”(하루키 2004, 49)이 중요하고, 동아시아처럼 공동체 역사가 미천한 경우에는 특히 미래가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강조가 의미하는 바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논의가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경험했던 집단적 기억에만 근거하여 재발견·변형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

12) 여기서 필자가 의도하는 문화공동체란 상당한 정도로는 일상적 교류와 만남이 보다 활성화되고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생활공동체’에 가깝다.

을 뜻하며, 나아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내 사회들 간에 상호접촉과 교류가 많지 않았다고 하여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동아시아 자아상을 정립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님을 뜻한다. 이렇게 최근 들어 정체성에 기반 하여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구하는 논의가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유산으로서의 동아시아가 아니라 기획이자 지적 실험으로서 동아시아를 주창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것은 일면 자연스런 것이기도 하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지역주의가 태동하여 그 결과 ‘과정으로서의 공동체’가 성립될 수 있는 일차적 토대로는 무엇보다도 ‘지리적 근접성의 공동이익’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시작은 이렇게 지정제로부터 출발하지만, 현실의 지정제적 여건은 부족하고 미진해 보인다. 그래서 이 논문은 지정제적 접근에 부가하여 지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동아시아 문화공동체가 ‘다양성의 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내 구성원들 간에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민족주의의 경우처럼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에서도 언어가 중요하게 된다. 앤더슨의 적절히 지적했듯이, 공동체 형성과 지속에 있어서 언어는 “특별한 결속감을 만들며 상상의 공동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능력”(앤더슨 2002, 173)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경우도 동아시아 주민들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존재 내지는 공통된 언어습득의 체계화가 긴히 요청된다.¹³⁾ 21세기 지구화 흐름 속에서도 동아시아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제약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심리적 간극”(이희옥 2003, 118)에 있는 만큼이나 이러한 심리적 간극을 줄여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문제는 기존의 국민국가적 틀과 시각으로는 동아시아에 공유된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그래도 필자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낙관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기존의 인쇄 및 구어체 언어를 보완해 나가는 영상매체 등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다중언어 번역기기의 발달에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인쇄체 언어가 민족주의를 지탱하는 데 유용했던 만큼이나 영화라든가 TV 드라마, 대중가요 등을 통해서 동아시아인들 간에 정서적 유대와 공동의 문화향유자라는 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그만큼 동아시아 공동체와 정체성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둘째, 의사소통의 공감대 확대를 위해 공통 언어의 문제가 중요한 것 못지 않게 또 하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전략에서 주목해야 할 측면은 동아시아 공동역사관 정립이다. 20세기 뒤늦게 국민국가 건설에 뛰어들어 100년의 시간을 서로 싸우고 경합하면서 지내는 사이에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그 보다 긴 과거 시대로부터 공동의 활동무대를 기초로 하여 경제·문화적 교환·교류를 활발히 전개해 온 사실을 망각해 왔다.

13) 바로 여기서 어떻게 보다 손쉽게 대면적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인가의 문제의식에서 문화공동체 전략에서 공통 언어의 구사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촉구하고 싶다.

14) 이런 시각에서 보면 최근 한류 열풍은 그에 대한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타이완류, 베트남류, 인도네시아류 등 다양한 대중문화들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확장되어 나가는 시작이라고 본다면, 이는 동아시아 공동체 및 정체성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문화 현상인 것으로 볼 것이다. 한류 현상에 대한 세세한 논의는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제42집(2002년 2월)의 특집 “동아시아의 한류”를 참조.

그래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도 여전히 자민족 중심적인 영토분쟁과 역사관 정립에 급급하여 공동의 동아시아적 역사관을 갖추어 나가는 데는 부족해 보인다. 한 예로 2004년 한국과 중국 간에 불거져 나온 고구려사 논쟁 역시 고구려가 중국의 한 변방의 역사나 아니면 한국의 고대 사냐의 제로섬적 역사 소유권 문제로 비화되어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이 한중 양국간에 격렬한 민족주의 대결로 치달아 나갈 따름이다. 그 옛날 중국과 한국이 국민국가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동아시아 영토 내의 고구려는 그 자체 고구려이지 중국이나 한국 누구 일방의 것이 아니리라 하는 의미의 동아시아 공동역사를 재조명해 나갈 때 비로소 동아시아 공동역사관 정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동아시아적 정체성이 보다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간에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독도/죽도 영유권 문제나 동해/일본해의 명칭 문제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즉, 특정의 섬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특정 민족 내지는 특정 종족의 독점적 관할권 하에 있지 않았던 한, 그 섬은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다양한 위상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아시아 공동역사관 정립이 요청된다. 물론 동아시아 역사관을 공유한다는 것이 곧 독도/죽도에 대한 현재 특정 국가의 관할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영토의 관할권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유동적인 동아시아의 흐름에 의해 변화되어 나가는 것임을 확인하고,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그 섬의 현재적 위상과 관할권을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적 시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동해/일본해 표기에 있어서도 그것이 특정 국가의 관할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이를 동아시아의 공유유산이자 공동 관할권 하의 것으로 서로 합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동아시아적 접근이 요청된다. 일각에서 서해를 황해로 하듯이 동해/일본해를 청해로 하면 어떤가의 제안은 특정 바다를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닌 동아시아 공동의 것임을 만방에 알림으로써 동아시아 다층적 정체성의 함양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상매체 언어의 활성화와 동아시아 공동역사관의 상호 조정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과 관련하여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의 연장선상에서 백영서가 제시하는 ‘복합 국가론’도 기존의 국민국가 지상주의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고 있다. 일종의 정치적 접근 방식을 띠고 있는 복합국가론은 단일의 국민국가성을 넘어서서 상생-화해-협력-공존-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다원적 거점화에 토대를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현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과 홍콩, 대만, 티베트를 포괄하는 1국 다체제의 탈집중화 내지는 연방제라든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론되고 있는 국가연합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실질적인 자치를 허용하는 연방제 확대 내지는 국가연합으로의 변신을 통해서 단일형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라는 보다 큰 지리적 범주에서 각 지방 단위들 간에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공존이 보다 확보될 경우, 이것이 바로 지구촌과 국민국가 사이를 잇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복합국가론은 세계시민의식과 지구촌을 망라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와 각각의 지방-종족-종교적 소집단을 연결 짓는 또 하나의 매개적 광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으로써 21세기 지구화 흐름과 직접 연결되어 나갈 수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국민국가의 중간매개항”(백영서 2000, 71)으로서 복합국가들이 다시 한번 더 모아지는 것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는 하나의 단위이기보다는 연계 고리이다. 이렇게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아시아 대 서구라는 이분법적인 대립구도의 단위가기보다는 지구촌과 국민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이자 연계로서 바라보게 되면, 문화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를 통해 “국민국가의 강제성을 획기적으로 제약하면서 해방적 기능을 활성화할 새로운 국가 구상”(백영서 1999, 20)이 가능하게 된다는 데서 ‘지적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를 통한 복합국가론의 유용성이 존재한다.

복합국가들이 모여 문화공동체를 이룬 이른바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가 국민국가와 지구촌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역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동아시아의 통합 정도를 느슨한 지붕 정도에 머물 것을 요청한다. 여기서 지적 실험으로서 동아시아는 국민국가의 경직성과 단일화에 대한 거부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아시아 공동체는 광역에 기초한 또 하나의 광역 단일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국민국가의 존재 의의와 타당성에 대한 또 하나의 느슨한 묶음으로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가 국민국가를 견제·보완하면서 동시에 지구화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의 폐해에 대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는 느슨한 연합인 한, 21세기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는 다양한 형태의 문명과 생활방식이 공존해 나가도록 다원성과 관용성을 높이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가 가속화된 통합이나 공동의 지역정부를 두는 준세계정부로 나아가지 않고 제도화된 협상 틀에 따라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상호이익에서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

넷째,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는 단일성이나 중심 보다는 다원성과 상호 연계된 고리 내지는 다중첩적 교차를 중시한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는 “단일 문명을 공유한 한 덩어리가 아니라 동아시아 권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가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장”(백영서 2000, 71)으로서 파악된다. 그 결과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이나 중국의 중화주의 또는 베트남의 인도차이나연합과 같은 특정의 패권적 질서를 거부하고 주변적 주체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수평-공존화 과정에 강조를 둔다. 복합국가를 거쳐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각 구성 국가들은 동아시아적 시각과 인권존중을 포함한 다층적 정체성 교육에 앞장설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백영서(2000, 73)의 강조처럼, 한국자본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현지(특히 동남아)에서 초래하는 반발과 한국에 찾

아 온 아시아인 노동자(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의 인권문제를 일국적 시각이나 전 지구적 자본의 획일화 논리를 벗어나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시각으로 해결하려는 창조적 실험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는 교육과 의사소통 증진 그리고 경제적 상호성의 증진을 통해서 동아시아 다층적 정체성이 보다 확대되고 또 복합국가를 통해 느슨한 연합이 주가 되는 정치질서가 자리 잡게 되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이며 그러한 한 그러한 가능성은 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전제한다. 다시 말해서 지적 실험이자 기획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는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동아시아와는 구별되는데, 그 이유는 동아시아 과거를 다시 쓸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마치 민족이 “상상된”¹⁵⁾ 것인 만큼이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도 상상에 의해 발명되고 “수평적 동료의식”(앤더슨 2002, 27)을 토대로 기획되지만 반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민족과는 달리 미래로 향한다는 점에서 과거를 다르게 상상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뒷받침하게 될 동아시아 정체성은 20세기 식으로 서양에 대항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 그것은 “초월되어야 할 근대성이 더 이상 서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근대성이라는 사실”(딜릭 2000, 111)을 인식한 토대 위에서 ‘지구촌 정체성’으로까지 확대되는 전향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서구적 시각과 권력의 이해 그리고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확산에 맞추어 위로부터 정의된 동아시아 지역을 거부하고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성되고 재편되는 매일의 일상적 필요와 상호작용에 맞추어서 아래로부터 형성되어지는 동아시아 자

15) 앤더슨의 주장에 따르면,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의 성원들도 대부분의 자기 동료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지만,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서로 친교의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다”(앤더슨 2002, 25).

아상이야말로 바로 동아시아 공동체가 기반을 두어야 할 다층적 정체성의 목표이다.

참고문헌

- 고병익. 1995. “동아시아 나라들의 상호소원과 통합.” 정문길 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권율. 2004. “동아시아 지역주의: ASEAN의 시각과 전략.” 『동남아시아 연구』 14(1).
- 〈동아시아의 한류〉(특집). 2002. 『동아연구』 42.
- 딜릭, 아리프. 1995.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 정문길 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딜릭, 아리프. 2000. “역사와 대립되는 문화인가? 동아시아 정체성의 정치학.” 정문길 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배극찬. 2002. 『동아시아 정체성 창출방안 연구』. 외교안보연구원.
- 백영서. 2000.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 한국인의 시각.” 정문길 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백영서. 1999. “20세기형 동아시아 문명과 국민국가를 넘어서: 한민족공동체의 선택.” 『창작과 비평』 27(4).
- 신윤환. 2004.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탈동북아중심주의적 관점.” 2004년 5월 29일 한국동남아연구소 월례발표회에서의 발표 논문.
- 앤더슨, 베네딕트 저. 윤형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 이흥종. 2002. “동·서양 국제정치관의 비교.” 강태훈 외.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국제관계』. 오름.
- 이희옥. 2003. “동북아시대 시민사회와 문화교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주최 2003년 10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신구상〉 심포지움 자료집.
- 와다 하루키 지음. 이원덕 옮김. 2004.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 Okfen, Nuria, 2003.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What ASEM and APEC can tell us.” CGCR Working Paper No. 117/03.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The University of Warwick, June. <http://www.warwick.ac.uk/fac/soc/CSGR/wpapers/wp11703.pdf>.

ABSTRACT

Exploring the possibilities and strategies to construct East Asian Community

YANG Gilhyun

Associate Professor,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hared geography, economy and consciousness(identity in particular) on which East Asian community is based. In the article, geography refers to the utility of geographic proximity; economy means economic interdependence through interchange and cooperation; and, consciousness stands for 'multiple identity' in connection with East Asian self-image. The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y and utility of 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by cultivating multiple identities as well as for cultivating multiple identities, focusing on the following four themes. First, the primary possibility of East Asian community starts off from the common benefits due to the geographic proximity. Second, the progressive impetus of East Asian community draws from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through interchange and cooperation corresponding to globalization. Third, the multiple identitie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stablish East Asian community in an effective way. Fourth, there should be concerted efforts to enlarge common identity shared by East Asian peoples in order to construct 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political

advancement and economic prosperity of the region.

Key Word : East Asian Community, Geographic Proximity, Economic Interdependence, Multiple Identity, Cultural Community, East Asian self-Image